분열이냐 통합이냐 제 3지대 신당 갈림길

박상천 "당대당 형식의 신설 합당 논의할 수 있다"

김한길 "통합 위해 모든 기득권 포기…탈당도 불사"

제3지대 대통합 신당 합류를 둘러싸고 통합민주당이 분열과 통합의 마지막 기로에 섰다. 통합민주당 대통합파가 당 차원의 제3지대 대통합 신당 합류를 위해 탈당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춰 24일 오전 9시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날 아침까지 당 지도부의 제3지대 대통합 신당 합류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합민주당은 사실상 분열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23일 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통합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 중도개혁통합추진위 연석회의를 열고 제3지대 대통합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상천 공동 대표는 제3지대 대통합 신당의 임시 지도부가 꾸려진다면 '당대 당' 형식의 신설 합당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나타냈다.

통합민주당이 처음부터 제3지대 신당 결성의 주체로 참여하면 대통합을 추진하는 5개 주체 가운데 하나에 불과, 통합민주당의 정체성과 주도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제3지대 대통합 신당과의 신설 합당을 통해 통합민주당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통합민주당의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박상천 대표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중도개혁대통합추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잡탕식 대통합'을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김한길 공동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도개혁세력의 대선 승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이달 안에 대통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특히, 대통합을 위해 자신부터 공동 대표직을 내놓는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경우에 따라 중도통합신당 출신 의원들과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박상천 대표와 김한길 대표는 이날 밤 최종 회동을 갖고 제3지대 대통합 신당 합류 문제를 가닥 지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4일 통합민주당 대통합파의 탈당이 현실화되는 것은 물론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구 중도통합신당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면서 통합민주당은 창당 2개월 만에 사실상 분당되는 결과를 맞을 전망이다.

한편, 24일 발족하는 제3지대 대통합 신당 창당준비위에는 통합민주당 대통합파 의원 4명,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 15명 등 19명의 현역의원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어서 전체 의석은 대통합 추진 모임의 45명을 포함, 64석에 이를 전망이다.

이 경우 제3지대 대통합 신당은 58석의 열린우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2당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통합민주당의 구 중도통합신당 의원들(20명)까지 합류한다면 제3지대 대통합 신당의 80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들은 오는 27일 이전 탈당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매형-처남 사이 왜 그래?

李측-김재정씨 고소 취하 싸고 또 '삐걱'

캠프측 오늘 '도곡동 땅 자금흐름' 공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박근혜 전 대표측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의 취소 여부를 놓고 '매형'측과 '처남'측이 23일 또 한번의 불협화음을 냈다.

김씨의 변호인이 이날 오전 검찰에서 고소·고발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 전 시장 캠프에서는 즉각 이를 부인했고 결국 회견이 취소되는 등 혼선을 빚은 것.

특히 캠프는 기자회견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시에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한 뒤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면서 캠프 내부에서는 김씨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취소 '오락가락'=김씨가 지난 4일 서울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벌써 하루에도 몇차례씩 엎치락 뒤치락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이 전 시장 캠프는 "이번 고소.고발 건은 김씨 개인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으나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건을 공안부가 아닌 특수부로 배당한데다 당 지도부가 "검증은 당내에서 하라"고 취소를 촉구하면서 상황은 복잡하게 얽혔다.

이에 따라 캠프 내부에서는 "차제에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는 강경론과 "당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온건론이 맞섰고, 결국 지난 11일 선대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김씨에게 고소 취소를 권유키로 결정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나 지난 19일 검증청문회를 고비로 김씨가 고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됐으며 결국 이날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가 검찰에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혀 '취소'가 현실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전 시장 캠프가 "취소가 아니다"라며 제지에 나섰다. 지난번 '취소'를 권유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된 것.

결국 김씨측이 입장을 번복해 일단 이날은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프닝은 일단 마무리됐다.

◇캠프 '당혹·고민'=캠프 핵심관계자는 이날 "김씨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고발 취소를 발표키로 했으나 캠프측에서 이를 뜯어말린 것으로 안다"며 "판단은 김씨가 하는 것이나 현재로선 취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번 캠프측의 '취소 권유'와 김씨의 '고소 강행'을 두고 박 전 대표측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 전 시장측은 김씨측이 전혀 '컨트롤'이 안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고소 취소 자체를 놓고도 고민이다. 그대로 밀어붙이자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경선전에 검찰수사 변수가 개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취소하자니 "역시 뭔가 구린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캠프 내부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여전히 소장파 중심의 강경론과 이상득 국회부의장, 박희태 선대위원장 등 '어른'들을 중심으로 한 온건론이 맞서고 있다.

한편 캠프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의혹 해소 차원에서 당 검증위원회에 제출했던 김재정씨의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오는 24일 공개키로 했다. /연합뉴스

2차 민심대장정을 마친 손학규 전 지사가 23일 오전 서대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과 지분을 다 버리고 대통합을 위해 누구라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차 민심대장정 마친 손학규 前지사

"이제 통합 대장정 나서겠다"

"기득권 버리고 박상천 대표 만날 것"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23일 범여권의 통합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합 작업의 전면에 나서겠다"며 통합의 전도사 역을 자임하는 '통합대장정'에 적극 나설 뜻임을 밝혔다.

지난 1일부터 22일간 진행된 '2차 민심대장정'을 끝내고 여의도정치에 복귀한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대문 캠프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시간 이후 민주평화선진을 지향하는 미래세력의 대통합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만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전 지사는 "대통합이 지분싸움으로 비치거나 과거를 다시 엮어내는 이름만의 대통합이 돼선 안되고 조건없는 통합, 기득권을 버리는 통합, 함께 하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제게 어떤 종류의 기득권이나 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버리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강한 통합의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그동안 지방을 순회하면서 조직구축에만 힘을 쏟았지, 실제 통합노력은 부족했다는 일부 비판여론을 잠재우는 한편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경선을 앞두고 통합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지세 확산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좀처럼 6~7%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범여권의 틀이 완전히 짜여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도 적극적 통합행보에 나서게 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손 전 지사는 이날 구체적으로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를 적극 만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통합민주당이 대통합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해공원 명칭 사용 지역주의 광풍 부를 것"

박찬종 前의원 주장

박찬종 전 국회의원은 23일 "경남 합천군이 새천년 생명의 숲 명칭을 '일해공원'으로 변경한 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하고 경남지사와 합천군수가 나서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전 대통령의 호를 공원 명칭으로 사용하면 새로운 경상도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반대편의 전라도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요인이 돼 연말 대선에서 다시 지역주의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난과 비판에 침묵하고 있는 전 전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해' 명칭 사용을 취소토록 하면 파동은 끝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靑 "법무장관 교체계획 없다"

주중 금감위장 후임 인사할 듯

청와대는 23일 김성호 법무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고, 이르면 이번주중 후임자가 내정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장관 교체설과 관련, "현재로선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개각은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만 현재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고, 다른 고위 관계자도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지만 인사결정을 하는 청와대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각종 선거관련 검찰수사 및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선거관리의 주요 부문을 담당할 법무장관에 대한 '코드인사'가 이뤄질 경우, 공정선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중립내각 구성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6일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내달초 임기가 만료되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후임 인사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금감위원장에는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 유지창 은행연합회회장,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